

# 초대 통합의회 의장단 선출 놓고 출범 전부터 '신경전'

## 안건협의체 구성...상임위 배분 등 논의 후 24일 결과 보고 자치법규 81건 체계로...의원 행동강령·정책지원관 정비

전남광주통합시의원 당선인들이 첫 임 시회를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로 하고, 통합 의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광주통합시의원 당선인 91명은 9 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주요 현안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 자치법규, 주요 현안, 행정 준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선인들은 통합특별시의회 첫 임 시회를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첫 임시회 개최 장소로는 전남도 의회 본회의장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제 3의 장소가 거론됐다. 당선인들은 여건과 준비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첫 임시회를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안건 협의체 운영도 결정됐다. 안건 협의체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필요한 핵심 안건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의 기구다. 출범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건 협의체는 권역별로 광주 5명, 전남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에서는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의원이, 전남에서는 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안건 협의체는 핵심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구성과 배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는 11~14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안건 협의체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방식, 상임위원 정수, 지역 및 정당별 배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오는 24일 예정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긴장감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특별시의원 91명 중 전남권 의원이 6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광주권 의원들은 전남권 중심의 의장단 구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전남권에서는 의장단 선출은 의회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들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각각 운영해 온 자치법규 124건(전남 74건·광주 50건)도 81건 체계로 통합 정립하기로 했다. 출범일까지 우선 정비되는 법규는 총 72건이다. 이중 조례 32건, 규칙 18건, 훈령·예규 13건 등 63건은 새로 통합 제정하고 9건은 폐지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회의규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의원 행동강령, 정책지원관 운영, 연구활동 지원, 의회사무처 조직·인사·복무 관련 규정도 통합 체계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이번 간담회와 함께 오는 24일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향후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시-중 차하일학회, 민간 외교로 한·중관계 회복 모색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대표적 민간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차하 일학회를 방문해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실질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중국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 민간 외교 채널을 활용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광주시청

### “서해안 해저 고속전력망 구축 본격화해야” 안도걸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핵심 인프라 확충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원내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광주 동남을·사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전력망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민간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11차 장기 송전 설비계획에만도 70조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정과 공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력망을 구축해 왔지만, AI·에너지 전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약 50조원이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전력망 확충 사업에 필요한 장기 안정자금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향후 과제로 서해안 해저 고속전력망(HVDC) 구축 △동해안·서해안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망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수익구조 및 위험분담 체계 마련 △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민간 투자를 연계한 금융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도, 생활인구 중심 인구정책 ‘지역 활력’ 기대

###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월평균 391만명 집계 체류인구 321만명...재방문율·체류일 등 전국평균 상회

전남도가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으로 지역 활력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월평균 391만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등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지역 간 비교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에서 전남의 등록인구는 70만명, 체류인구는 321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4.6배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생활인구 주요 특성 8개 지표 가운데 재방문율 40.8%, 체류일수 3.3일, 평균 숙박일수 3.7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 72.8%,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12만5000원 등 5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전남 방문이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체류·소비·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2024년 ‘2050 전라남도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25년에는 ‘인구대전환 시즌2, 생활인구 생성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생성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연결·유입·성장’의 3대 전략 아래 20개 핵심 사업과 100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관계인구 확대, 체류인구 유지, 정주인구 전환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체류인구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소비와 교류가 늘고, 지역 활력도 커진다”며 “시·군과 협력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결혼을 한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이 사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데, 이 추정을 깰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

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모가 어딘지 찾을 수 없거나 누가 생모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정 시한인 지난날 말까지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혼외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성평등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완도 청산도·진도 용등·신안 자은한운·장흥군

해양수산부는 완도 청산도와 진도 용등, 신안 자은한운, 장흥군 등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배후 지역의 중심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 청산도와 진도 용등, 신안 자은한운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유형에 선정됐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시설 조성을 통해 어촌 경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신규 대상지는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지원된다. 규모는 총 443 억원이다. 장흥군은 시·군 역량 강화 유형에 선정돼 1년간 1억4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돼 마을 컨설팅과 교육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다목적센터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공동작업장과 지역음식판매장 조성, 마을 경관 정비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청사 입지 관심사...11월 중앙회 이사회서 최종 확정

▶1면에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역 본부는 대부분 시·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통합본부 입지는 행정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청사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광주 상무지구와 무안 남야, 순천 등 3개 권역 청사를 활용하는 분산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통합의 청사 배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 남야의 능협 전남본부 청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능협중앙회가 직접 건립한 전남본부 청사는 NH농협은행 소유인 광주본부보다 규모가 크고 사무공간과 회의시설, 향후 조직 확대에 대비한 여유 공간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본부는 광주시청과 주요 행정기관, 금융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대외 협력과 행정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능협은 향후 내부 의견 수렴과 세부 검토를 거쳐 최종 통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포함한 통합 운영 방안은 전남광주특별시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오는 11월께 능협중앙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능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통합본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건립한 전남본부 청사는 NH농협은행 소유인 광주본부보다 규모가 크고 사무공간과 회의시설, 향후 조직 확대에 대

### 5등급 차량 조기폐차·DPF 부착 사업 연말 종료 광주시, 예산 소진 시 마감...‘차량 소유자 적극 참여’

광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업 참여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다만 4등급 경우 차와 4·5등급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자를 선적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